

“현대차 울산 물량, 전주로 이관해달라”

도의회 의장단, 울산공장 찾아 노사 양측 협조 요청 노조 “전주공장 어려움 해결 고민 중... 최선 다할 것” 부사장 “물량 부족문제 잘 알고 있어 차종 이관 계획”

전북도의회 의장단은 28일 현대차 울산공장을 긴급 방문, 스타리아와 펠리세이드 생산물량의 전주공장 이관을 위해 노사 양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송지용 의장(완주)과 최영일(순창) 부의장은 오는 30일 예정된 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 이상수 지부장 등 노조 임원진과 최준형 부사장을 차례로 만나 물량 이관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송 의장과 최 부의장은 “전주공장은 연간 10만 대의 상용차 생산 설비를 갖추고, 지난해 3만16천대 생산에 그치면서 일부 직원이 전환 배치되는 등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며 “전주공장 물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직원들의 고용불안과 부품·협력업체의 경영난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으로 이어지는 만큼 노사간 톤 큰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현대자동차 노조 이상수 지부장은 “전주공장은 7, 8년간 가동률 50% 미만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장은 이어, 현대차 최준형 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현대자동차가 2025년까지 플러그인, 수소모빌리티 등에 총 60조원을 투자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소 상용차를 생산하고 수소충전소가 갖춰진 전주공장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최준형 부사장은 “전주공장의 물량 부족 문제를 잘 알고 있어 울산공장에서 생산 중인 차종을 이관하려 한다”며 “전주와 울산공장 모두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오는 30일 제4차 고용안정위원회를 열고, 펠리세이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완주)과 최영일(순창) 부의장은 오는 30일 예정된 고용안정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 이상수 지부장 등 노조 임원진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드 증산과 전주공장 물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주공장과 울산공장의 생산 차종을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김희수 도의원, 전주장애인단체 총연합회 감사패 수여받아

전북도의회 김희수(전주6)의원이 28일 시·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장애인과 관련해 그동안 봉사활동과 사명감 등으로 소외계층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 같은 패를 수여받았다.

김 의원은 “그간 장애인 관련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을 왕성히 펼치면서 평소 장애인 복지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희수 의원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도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큰 책임감을 갖겠다”며 “사회적 약자 권익 우선보호에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문직 중 성범죄 가장 많은 직업 ‘의사’

지난 4년동안 602명 입건... 연 평균 150명 꼴
한병도 의원 “성범죄 근절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지난 4년간 성범죄로 입건된 의사는 602명으로, 연평균 150명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2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4년간 성범죄로 입건된 전문직 종사자는 모두 5,579명이었고 그 중 의사는 602명으로 전문직 중 가장 많은 숫자였다.

연도별 전문직 성범죄자는 2017년 1,461명, 2018년 1,652명, 2019년 1,353명, 2020년 1,113명이었다.

그 중 의사 성범죄자는 2017년 137명,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2020년 155명이었고, 2017년을 제외하고는 전문직 중 가장 많이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유형별 의사 성범죄자는 강간·강제추행이 5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카메라등이용촬영(66명), 통신매체이용음란(6명),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3명) 순이었다.

한편, 지난 4년간 의사를 제외한 전문직 성범죄자는 예술인이 495명이었으며, 종교가가 477명, 교수가 171명, 언론인이 82명, 변호사가 50명이며 직업에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전문직도 3,702명에 달했다.

한병도 의원은 “사회적 신망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의 성범죄 행위를 지위를 이용한 범죄인 가능성이 커져 문제”라고 지적하며 “전문직 종사자의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성범죄자 신상공개 널리... 정확히... 제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상공개 강화 정책공약 발표
고지대상을 남녀노소 모든 이웃으로 확대 등 담야
신상정보 정확성 향상·접근성 강화 방안도 내놓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경기도지사)가 28일 자신의 SNS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대상을 남녀노소 모든 이웃으로 확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정확성 향상, △고지 방법 다각화로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접근성 강화, △신상정보 공개기간 확대 및 공개대상 성범죄 범위 확대 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성범죄 전과자가 우리 동네로 이사 왔음을 알리는 우편물 여러 분은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라고 글을 열며, 성범죄자 신상의 고지대상을 아동청소년 가수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성범죄 신상공개 제도의 불완전함을 지적했다.

이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두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당시 상황 등을 예로 들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또, “성범죄는 재범률이 특히 높은 범죄라 ‘성범죄 안전망’은 이중 삼중 아무리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누구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위한 대책을 끊임없이 보강해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월 16일 성평등 공약을 발표하며 디지털성범죄,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등 각종 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이어, 이날 1일에는 이른바 전자발찌 제도의 강화 방안을 공개하며, 폭력범죄 근절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유호상 기자

성경찬 도의원, 민주당대표 ‘1급 포상’ 영예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창)이 지난 18일 제66주년 더불어민주당 창당기념일 행사에서 당대표 1급 포상(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을 수상했다.

이번 상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와 중앙당 윤리 심판원의 심사·의결을 거쳐 전북도와 당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성 의원은 전북도의회 하반기 원내대표를 맡아 도의회와 정당간 소통과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대응해 자치입법권 강화 인 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성경찬 의원은 “전북도 발전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 확립과 위상 정립,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노력이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라북도와 당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성 의원은 체육인 출신으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도의회에 입성한 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북도의회 한빛역전대책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원내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및 더불어민주당 전국 시·도 원내대표단회의의 사무총장으로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자치경찰위원장 의회 출석·답변 의무 있다”

행안부 유권 해석 따라... 두세훈 도의원 ‘환영’ 입장

행정안전부가 “자치경찰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법과 함께 지방자치법이 적용되고,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의회 출석을 규정한 표준조례안은 위법 또는 무효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도자치경찰위원장의 의회 출석 의무 관련해 본 의원의 주장과 동일한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영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의 의회 출석 거부 사태는 18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전북도의회 경시와 지방자치법 위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면서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이상 이영규 위원장은 180만 도민과 도의회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7월 출범한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초기부터 지난 9월 임시회의까지 이영규 위원장의 도의회 분회의 등 출석에 대한 불리해석과 조례 제정 등 성 여부 등을 놓고 도의회 출석 거부 사태를 겪었다.

이 가운데 두 의원은 지난 8월 페이스북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는 성질상 자치사무이고, 경찰법’이 명백히 전북도에 위임한 단체책임사무로, 전북도 소관사무에 해당해 명백히 ‘지방자치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면서 “조례에 근거해 도자치경찰위원장이 도

의회 출석·답변의무가 있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부패된 의무 위반이다”는 법리해석을 내놓았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28일 전북자치경찰위원회도 행안부에 도자치경찰위원장의 의회 출석의무를 포함한 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 관련 법령에 관해 질의를 했고, 지난 9월 15일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회신을 보냈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 회신내용에 따르면, 첫째,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질의한 ‘경찰법 제4조’에서 규정된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위에 속하는지에 대해 “경찰법’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시·도의 조례제정권이 인정되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이관받은 사무로 규정하는 점 등을 들어 자치경찰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답했다.

둘째, ‘경찰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경찰청 표준조례안 제15조’ 위원장이 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이 위법 또는 무효의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이 적용돼 의회 출석을 규정한 표준조례안이 위법 또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두세훈 의원은 “이영규 도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사무를 포함한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10월 임시회부터는 도의회 분회의에 성실히 출석해 도의회를 존중하면서 자치경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도내 벼 병해충 발생 가시화... 정부 긴급재난지역 선포해야’

전북도내 벼 병해충 발생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어 정부가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도의회 강용구(남원2·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수확을 얼마 남기지 않은 도내 논에 최근 목도열병과 세균성 벼알머름병, 가지도열병에 개시무늬병까지 번져 농가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며 “정부가 긴급재난지역 선포를 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의 주장은 전북도에서는 도열병 등에 강한 품종인 신동진 쌀을 대부분 재배 중인데 도열병이 확산되고 있고, 현재 도열병을 포함해 개시무늬병 등 3가지 이상의 병이 발생·확산돼 정량적인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용구 의원은 “올해 6월부터 9월 중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정읍·고창 사업 반영돼

노을대교·정읍 부진-칠보 고창 상하-해리 등 3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8일 확정 발표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500억 이상 일괄예타 사업으로는 고창의 ‘노을대교(국도 77호 고창 해리~부안 변산)와 정읍의 국지도 49호 정읍 부진~칠보 등 2건, 500억 미만 비예타 사업으로는 고창의 ‘국도22호 고창 상하~해리 등 총 3건의 정읍·고창 사업들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행정 경험을 통한 사업계획의 개선·변경으로 예타 통과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 만큼 앞으로도 적실사업 추진 일정 등을 미리 세심하게 챙길 계획이다.

먼저, 노을대교 건설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 필요한 기본계획 용역은 2022년 포괄용역비를 사용, 10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급진 말이나 2022년 1월에 이뤄질 전망이며, 심의결과 입찰방법이 탄기(tan-key)로 결정되면, 2022년 6~7월에 노을대교의 터기 발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 의원은 고창·부안지역을 넘어 전북발전은 견인할 명품 교량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의 성원을 당부했다.

또한, 국지도 49호 정읍 부진~칠보 사업이 완료되면, 정읍시와 칠보간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잦은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해 간선도로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고, 임실·전주~신내 옥정호·구월초공원~내장산 관광지 간의 접근성이 용이해져 단일관광권 활성화가 기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창의 국도22호 고창 상하~해리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상하능동, 구시포해수욕장 등 관광지 접근성도 향상돼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그간 함께 뜻과 열정을 모아주신 정읍·고창 주민들과 시·군 및 전북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